



고리 3, 4호기와 신속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노윤래

원자력 칼럼니스트 · 전 한전원자력연료 사장



- 서울대 전기공학과 졸업
- 한국원자력연구소 연구관
- 한국전력공사 영광원자력본부장
- 한전원자력연료 사장
- 서울대, 한양대 강사 역임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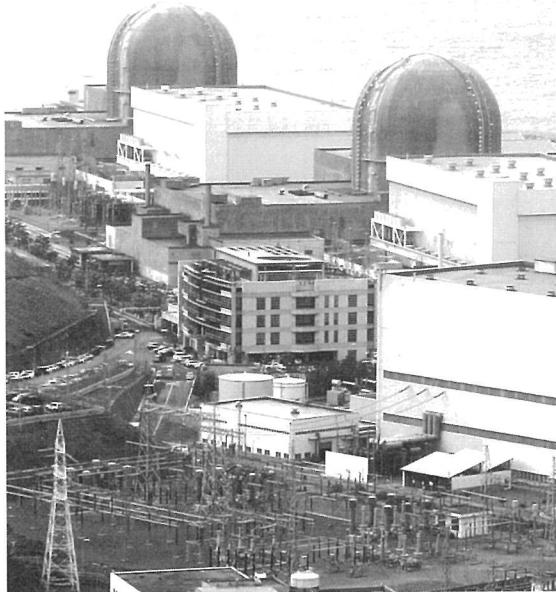
78년 8월 초 필자가 한전에서 1직급으로 승진됨과 동시에 원자력 발전부장으로 발령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더위와 씨름하며 운전 실적이 저조한 고리-1 원전의 개선을 위한 방법을 찾는 데 골몰하고 있던 때에 사장이 필자를 찾는다는 비서실의 연락을 받았다.

불과 넉 달 전에 상업 운전을 시작한 국내 최초의 원전인 고리-1은 벌써 서너 번 발전 정지가 되었고 그때마다 사장의 꾸지람을 받은지라 필자는 마음이 편치 못했던 터에 또 어떤 질책이 있을지 마음 조리며 사장실로 갔다.

김영준 당시 한전 사장은 수원농고 출신으로 1967년 농림부 장관으로 임명될 때까지 산림국장, 임업시험장장 등 주로 임업 관련 분야에 봉직한 전문 관료였다. 장관직을 끝낸 다음에는 경영 실적이 부진했던 홍한화섬, 동신화학 등 민간 기업의 사장으로 경영 실태를 호전시킨 공적이 인정되어 1976년 국내 최대의 공기업인 한전 사장으로 임명되었고, 한 차례 연임되면서 1982년 한국중공업 사장으로 전임될 때까지 6년간 한전의 최고 경영자로서 훌륭한 업적을 남긴 경영인이다.

소용돌이 시국의 한복판

사장실에 들어서자 뜻밖에도 김 사장은 다음날 고리에 가는데 필자에게 수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사장의 출장에는 통상 비서가 수행하는 것이 관행



고리 3,4호기

이기에 의아하게 생각했더니, 주한 미국 대사가 미국이 공급한 원전을 보고 싶어 고리 방문을 한다기에 사장이 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글라이스틴(William G. Gleysteen) 대사는 예일대학 출신으로 1978년 7월부터 1981년 6월까지 3년간 주한 대사로 근무했다. 대사로 재임한 기간은 그에게는 한미 양국 정부 간의 불편한 외교 관계로 인해 깊은 고뇌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나날이었을 것이다. 그가 재임한 기간 중인 1979년에 10. 26(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과 12. 12(신군부 쿠데타)를 경험했고 이듬해인 1980년에는 5. 18 광주항쟁 사건을 지켜보았기 때문이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이 안보와 경제 발전("싸우며 일하고, 일하며 싸우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불가피한 입장이었고, 지미 카터 미 대통령은 박정희 독재정권을 전복(?)시키기 위

해 한국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강력히 비난하면서 필요하다면 주한 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던 시기였다.

이와 같이 복잡 미묘한 양국 간의 틈새에서 한미 간의 정치 외교 상황을 면밀히 살핀 글라이스틴 대사는 두 나라 사이의 가교 역할을 무난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한국 근무를 마지막으로 전문 외교관 생활을 끝낸 후에도 평민 자격으로 2004년 타계할 때까지 20여 년간 한국의 정치 발전에 대해 미 정부의 자문 역할을 했다.

김영준 한전 사장의 뚜심

글라이스틴 대사가 고리 원전 방문을 끝내고 부산 해운대로 가면서 김영준 사장과 동승하게 되었는데 승용차 안에서 이루어진 대화가 고리-3, 4와 관련된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을 신속하게 처리한 요인이 되었다.

고리-3, 4 사업에 미국이 계속 참여하고 싶다는 대사의 발언에 김 사장은 한미 원자력협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미국의 원전 공급자는 입찰안내서(ITTB)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이는 1974년에 발효된 「원자력의 민간 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한미원자력협정)에 미국은 한국의 원전 사업에 발전 용량 3000MW 이내에서 지원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고리-3, 4는 한미 원자력협정이 개정되지 않으면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지적한 것이다(당시 고리 원전은 고리-1(587MW), 고리-2(650MW), 고리-3, 4(각각 1000MW로 계획되어 있었음)로 합계 3237MW가 된다. 한미협정에 명시된 '3000MW'는 미국이 한국에 지원하는 원전의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 필자 주).

필자는 ITTB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장의 발언을



김영준
전 한전 사장
(1916~2004)



윌리엄 글라이스틴
전 주한 미국대사
(1926~2002)

상대가 대사인 점을 고려하여 “제외될 수도 있다.”고 통역을 했다. 그런데 김 사장이 영어를 잘 모른다고 생각한 필자가 외교적 수사로 통역한 것은 큰 실수였다. 김 사장은 필자의 통역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반드시 제외될 것이다.”라고 수정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대사에게 그대로 전달하자 그는 매우 놀라면서 미국 정부는 이미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을 의회에 요청 중에 있고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을 양해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대사도 외교적 실언을 했다. 즉 미국은 민주 국가이므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도 의회를 조정할 수 없다는 발언을 한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민주 국가가 아니란 말인가?”라고 사장은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rfjg지만 필자는 사장의 이 발언을 통역하지 않았다. 다만 시간이 촉박하니 미국이 한국의 원전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면 ITB 발급 예정일 전까지 협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대사에게 알려주었다.

신속한 협정 개정으로 WH가 고리 3, 4호기 계약

글라이스틴은 사장과의 대화 내용을 신속히 미 국무부에 타전했고 행정부는 의회를 설득해 협정은 즉시 개정되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고리-3, 4의 주계약자

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WH)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이 결정으로 한국은 프랑스로부터 거센 반발을 받게 되었다. 프랑스의 프라마톰이 고리-3, 4의 주계약자로 내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오래 전부터 고리-3, 4에 깊은 관심을 갖고 프라마톰의 판매 엔지니어들이 수시로 한국 정부와 한전을 방문해 기술설명회를 가졌고, 1975년에는 한전의 기술진이 프랑스를 방문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요청에 따라 한전은 5명의 기술조사단(단장은 필자)을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에 파견해 원자로와 핵연료 제조 공장, 터빈-발전기 등 각종 BOP 기기 제조 공장과 엔지니어링 회사를 조사 방문해 유럽의 원전 기술이 충분히 우수함을 파악하고 있던 터였다.

글라이스틴 대사와의 면담에서 김영준 사장이 보여준 뚝심은 고리-3, 4 원전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었던 한미 원자력협정이 개정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미국은 정부와 의회가 신속한 공동 협의로 협정 개정을 처리함으로써 자국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날 여야 사이의 극한 대립과 당파적 정쟁으로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있는 국내의 정치 사회를 바라보면서 미국처럼 국익을 위한 정치가 언제쯤 가능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본다. ☕